



법원은 왜 불신받는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 경 신

판결문 공개 주장 2인 교수에 듣는다

강 장 뮤 남서울대 빅데이터 산업보안학과 교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인간 법관의 신뢰도가 의심받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무죄 판결과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무기징역 감형은 여론의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대기업 총수 재판을 지켜보는 서민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보이지 않는 판례로 굳어진 지 오래다. 이에 학계에서는 “판결문 공개를 통한 기계학습으로 법관의 판단을 돋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으로 판결의 경향도 살피자”는 주장이 나온다. 관련 기술 공개로 서민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제안도 있다. 8월 31일과 지난 5일 강장묵 남서울대 빅데이터 산업보안학과 교수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나, 판결문 공개가 사법정의와 정보기술 시장에 미칠 영향을 물었다.

“AI 판결문 학습, 데이터 분석… ‘사법불신’ 해소 묘안”

판결문 공개로 ‘사법불신’ 줄여야

-판결문 공개를 주장하는 이유는.

박경신 교수: 실명 판결문을 공개 하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유전무죄와 전관예우, 기타 인맥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찾은 부정적 경향(전관예우 등)을 살펴, 여러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다. 기계학습 측면을 보면, 먼 미래에는 관계에 악한 사람이 아닌 기계가 공정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강장묵 교수: 재판은 대국민 서비스다. 국민들이 인공지능 보조 판사 도입으로 유전무죄가 없어졌다고 평가하는 날이 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자연어 처리 기술이 발전해야 하는데, 실마리가 있다. 지난해 ‘인공지능 R&D 철린지’에서 가짜 뉴스 분석으로 2위에 올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탔다. 지금도 150만건의 뉴스를 분석하고 있다. 자연어 분석에 자신 있다.

-인공지능 도입이 사법농단을 포함해 기존 재판에 대한 불신을 줄이는 방편이 될 수 있을까.

박: 그렇다. 대법원 판결문은 1%, 하급

심은 0.5% 미만만 공개되는 상황이다. 사람들이 재판을 제대로 감시·비판하지 못하니 불신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상고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서다. 판결문 데이터를 분석하면 어느 사실관계 아래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견적을 낼 수 있다. 같은 데이터로 나온 견적이 비슷하니, 어떤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치가 나온다. 그럼 일정 선에서 포기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 ‘판사를 잘못 만나서 졌다’고 생각한다. 재판을 카드게임으로 보니까 패를 다시 받기 위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한다.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기계학습을 통해 판사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판사가 자신과 인공지능의 판단을 공개하고, 판단이 서로 달랐다면 그 이유도 함께 공개 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선고를 더 수긍할 수 있다.

강: 인공지능 도입과 데이터 분석으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 서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활성화와 데이터를 이용한 사법 정의 실현이다. 법조문 전체를 외우고 판결문 수백만 개를 학습한 인공지능과, 머리 좋은 인간이 하는 판결 중 어느 쪽이 정확하겠나.

공개땐 사법정의 바로세울수 있어 전관예우·인맥 영향 등 파악 가능 미래엔 기계가 ‘공정 판결’ 가능성도

AI, 기계학습 통해 판사에 도움 돼 데이터 분석땐 판결 견적도 가능 미국·캐나다·호주 등 판결문 공개

”

모바일 앱으로 법원 문턱 낮출수도

-데이터 분석과 기계학습에 필요한 판결문의 범위는.

박: 제한 없다. 데이터 분석이든 기계학습을 위해서든 실명 판결문은 많을수록 좋다.

강: 사생활 문제가 있다면, 비식별화 기술을 통해 판결문 속 이름을 바꿔줘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첫 단계가 각 데이터에 이름 붙이는 일이다. 사람이 상대방 이름을 알아야 A씨라고 부르는 점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판결문의 구조를 이해하면서도 개인정보 부분을 비식별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블록체인으로 보안도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 문제가 있으니 실명 판결문 전부를 공개하는 대신 민사는 2000만 원, 형사는 별금 100만원 이하 소액 판결문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데이터 분석과 기계학습 기술을 공개하면, 모바일 앱으로 새로운 사법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나와 비슷한 사건의 판결을 내다볼 수 있고, 변론서 작성도 훈자 할 수 있다. 그래도 못미더우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된다. 법원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 나는 데이터 과학으로 정의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

박: 소액 판결로만 기계학습을 하면, 인공지능이 거기에만 의미 있는 조언을 할 수 있다.

-판결문은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가 쉽지 않다. 해외는 어떤가.

박: 우리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진 미국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모두 실명으로 판결문을 공개한다. 온라인에서 당사자 이름과 사건 번호 입력하면 판결문 다나온다. 사생활 보호를 원하는 사람은 재판 받을 때 판결문을 익명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더불어 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판결문 실명 공개를 꼴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인공지능은 현법상 ‘법관의 양심’에 어떤 영향을 줄까.

박: 우리는 양심적 판단을 부정적·소극적으로 정의한다.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를 보면 안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인다. 법관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재판이 정의로운가. 양심을 적극적으로 펼 기회는 기계학습으로 잡을 수 있다. 물론 기계는 기존 판결을 학습해 정의에 대한 알고리즘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기계학습과 데이터분석을 동시에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유전무죄와 전관예우처럼 나쁜 경향을 배제하는 보정 코드를 넣어야 한다. 판사가 개별 사건을 모두 읽어 본 기계의 의견을 들을 때, 양심의 내용을 채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강: 판결문 데이터는 법관이 지금껏 쌓아온 판례 기반 통계다. 그러니 인공지능이 사법부가 구축해온 법관의 양심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 부자와 빈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가르치면, 기계가 국민이 바라는 법관의 양심과 다르게 판결할까. 그리고 현재 인공지능은 자의식을 가질 정도로 발전하지 못했다.

/이범중 기자 joker@metroseoul.co.kr

멈추지 않는 BMW 화재… 소비자協, 실험통해 검증

차량 시뮬레이션 테스트 등 진행

“원인 규명으로 결함 등 밝혀야”



8일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오산IC 부근을 달리다 불에 탄 2014년식 BMW 520d 차량. /연합뉴스

트레스 주행 테스트’와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속 스트레스 주행 테스트는 냉각수가 새는 조건 하에 고속 주행을 진행하는 방식이며 시뮬레이션 테스트는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에어컨을 켜고 주차 중 불이 난 120d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실험이다.

현재 BMW 차량에 대한 안전진단은 마무리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100여년 만에 찾아온 폭염과 건조한 날씨도 BMW 화재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한 이 같은 노력과는 별개로 BMW의 불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따르면 7일 오후 11시 10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오산IC 부근을 달리던 A(44)씨의 2014년형 BMW 520d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A씨는 운전 도중 차량 앞부분에서 연기가 나자 갓길로 주차하고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 대부분

이 불에 타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차량은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BMW 센터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화재사고가 잇따르는 것으로 보아 해당 차종에 대한 안전진단 점검 여부는 의미가 없어졌다”며 “현재로서는 원인규명에 집중해 제조사의 결함·축소 및 은폐에 관한 부분을 실험을 통해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참여한 위원 20명의 명단을 공개한 뒤 월 1~2회 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모든 자료 및 정보는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인터넷 등)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필수 교수는 “환경부 교통안전공단이 협력해 연말까지 조속히 원인규명을 하지 않는다면 BMW 차량의 화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와 같은 폭염이 내년에도 이어진다면 화재가 재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추석 우편물 1700만개 예상 우본, 10~28일 비상근무

우정사업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1700만개의 소포 우편물을 접수될 것으로 보고 비상 대응에 나선다.

우본은 10~28일을 ‘추석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우본은 특별소통기간 소포 우편물을 약 1700만개가 접수될 것으로 전망했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170만개로 평소보다 140%, 작년 같은 기간보다 9% 증가한 수준이다.

우본은 우편물 정시 배송을 위해 집배보조인력 1500여 명을 포함해 4100여 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 또 3600여 대의 운송차량과 각종 소통장비를 동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편물 중간보관장소 등을 확대 배달 거리를 줄이고 매일 안전점검을 하는 등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과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본은 추석 선물 우편물이 안전하게 정시에 배송되도록 부과하기 쉬운 어패류나 육류 등을 반드시 아이스팩을 함께 넣어 포장하고, 17일 이전에 배송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김나인 기자 silkn@